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85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3.26~2026.04.01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대통령(이재명), 예비후보, 희생자, 책임, 전환
경제·관광	관광객(여행), 상승, 소비, 기반, 미래
지역·사회	대통령(이재명), 희생자, 평화, 대응, 학생

※ 분석 기간 : 26.03.26.~26.04.01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대통령(이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타운홀 미팅 개최 및 신산업 육성 청사진 제시 -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역사적 결단 및 법적 보완 약속 -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 결정권 존중 및 주요 국책사업 방향 제시
	예비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당 김명호 후보의 민생 중심 생활비 절감 및 직접 민주주의 공약 -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후보들 간의 치열한 정책 경쟁 및 네거티브 공방 - 도의원 예비후보들의 공천 부적격 판정 및 무소속 출마 등 진통
	희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의 범국가적 관심 및 정치권 집결 - 4·3 희생자 배·보상의 진전과 미완의 과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 - 역사 왜곡 시설물에 대한 진실 바로잡기 및 미래 세대 전승 교육 강화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및 관권 선거 의혹에 대한 엄중한 문책 - 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책임 강화 요구 - 정치적 사안에 대한 공당의 공천 책임 및 후보 개인의 도의적 책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 및 탄소중립 선도 모델 구축 - K-콘텐츠와 연계한 체류형·고부가가치 글로벌 관광 산업으로의 전환 - 인재 양성 중심의 교육 혁신과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 구조 대전환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카지노 매출 6465억 원 역대 최대 기록 - 팬덤·교육 연계 대규모 해외 관광객 입도 활발 - 제주~인천 노선 5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항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 ㄹ당 1950원대 급등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213호로 역대 최고치 경신 - 제주 결혼 서비스 비용 전국 최대 상승폭 기록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체류 시간 늘었으나 1인당 지출은 감소 - 면세점 대신 시내 상점가로 쇼핑 패턴의 변화 - 삼다수-탐나는전 연계 프로모션으로 지역 소비 유도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약자 배려하는 '열린 관광' 무장애 환경 조성 - 지역 주력 산업 및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J-패스' 도입 추진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월읍 봉성리 일대 미래농업 체험 관광단지 조성 - 제13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성황리 개최 - 게임 및 우주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집중 육성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대통령(이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공항 갈등에 대한 '도민 결정권' 존중 및 자율 판단 당부 -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및 민사 소멸시효 완전 폐지 약속 - 제주4·3 유족의 오랜 염원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희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여 년 만의 4·3 가족관계 정정 첫 사례 확정 및 법적 지위 회복 - 제주 출신 6·25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 시료 채취 - 4·3 추념일을 맞이한 희생자 추모 및 도민 이동 편의 지원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 민중항쟁 정신 계승 및 반전 평화 실현을 위한 노동자 대회 - 미래세대의 평화 가치 내면화를 위한 교육 현장의 '평화주간' 운영 - 서예와 예술을 통한 4·3의 아픔 치유 및 평화 메시지 확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재난 상황에 대한 도지사 후보자별 정책 대응 분석 - 고사리 철 및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소방안전본부의 화재 대응 강화 - 중동 사태 여파에 따른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 및 수급 대응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인근 유괴 의심 사례 발생에 따른 경찰 및 교육청의 공동 대응 - 청소년 드론 레이싱 및 창의 AI 경진대회에서의 제주 학생 성과 - 제주 학생들의 제주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및 전승 교육 필요성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3월 26일~4월 1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1,127건임
 - 정치·행정 분야 563건, 경제·관광 169건, 지역·사회 395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대통령(이재명), 예비후보, 희생자, 책임, 전환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대통령(이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타운홀 미팅 개최 및 신산업 육성 청사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를 방문해 타운홀 미팅을 주재하고 재생에너지, 관광, 교육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발표하며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 및 글로벌 인재 허브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 · 특히 2030년까지 제주에 4대 과학기술원 연합 캠퍼스를 설립하고 신규 등록 차량의 100% 전기차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등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약속함. -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역사적 결단 및 법적 보완 약속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유족과의 간담회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는 법안 재입법 추진을 공식화하며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힘. · 또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추가 신고 기간 연장, 가족관계 정정 지원,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의 아카이브 구축 등 미완의 과제들을 실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약속함. <p>-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 결정권 존중 및 주요 국책사업 방향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은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을 고려해 도민들이 잘 판단해 달라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갈등 해결의 핵심임을 시사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향후 절차에서 도민 뜻 반영을 강조함. · 반면 제주와 육지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서는 섬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여 지역 내 오랜 논쟁에 대한 국가 수반으로서의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정치·행정	예비후보	<p>- 진보당 김명호 후보의 민생 중심 생활비 절감 및 직접 민주주의 공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명호 후보는 제2공항 갈등의 유일한 해법으로 주민투표를 제안하며, 택배 추가배송비 '0원' 시대 실현과 무상버스 및 완전공영제 도입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생활비 절감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함. · 또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공공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돌봄부지사' 신설을 제안하고, 재활용센터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쓰레기 정책 전반을 도민 중심의 책임 행정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강조함. <p>-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후보들 간의 치열한 정책 경쟁 및 네거티브 공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지사와 문대림, 위성곤 국회의원 등 민주당 주자들은 무제한 교통카드 도입, 물류 기본권 보장, 기본사회 모델 실현 등 제주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당내 경선 레이스에 돌입함. ·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비방성 문자 메시지 발송 의혹과 관련 선거 논란이 불거지며 상호 고발과 비판이 이어지는 등 혼탁한 양상을 보이자 도민 사회와 당원들 사이에서 정책 경쟁보다는 흠집 내기에 치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p>- 도의원 예비후보들의 공천 부적격 판정 및 무소속 출마 등 진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 도당 공관위는 과거 범죄 전력을 이유로 양경호, 김승준 의원 등 현역 의원을 포함한 3명에게 공천 부적격 통보를 내렸으나, 이후 재심 신청이 인용되면서 단수공천이나 경선 참여의 길이 다시 열리는 등 공천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발생함. ·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방식에 반발한 강상수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소나무당 소속이었던 양윤녕 예비후보가 당 해산에 따라 무소속으로 전환하는 등 정당별 공천 잡음과 후보 기근 현상이 겹치며 선거 구도의 유동성이 확대됨.

정치·행정	희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의 범국가적 관심 및 정치권 집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는 4월 3일 봉행되는 4·3 희생자 추념식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와 여야 주요 정당 대표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4년 만에 공식 참석을 확정하는 등 4·3의 정신을 기리는 자리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음. · 추념식 당일에는 제주 전역에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리고 시내버스가 전면 무료로 운행되는 등 도민 모두가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추념 주간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범도민적인 참여를 유도함. - 4·3 희생자 배·보상의 진전과 미완의 과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특별법 개정 이후 최초로 국가 차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9천 명이 넘는 희생자에 대한 최종 심의가 완료되는 등 실질적인 명예 회복이 진행중이나,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수형인 80여 명에 대한 무죄 판결과 재심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음. · 이에 문대림 후보 등 예비주자들은 희생자 신고 상설화, 행방불명인 신원 확인 국가 책임 강화, 치유 지원의 생활권 확대 등을 담은 실천 과제를 발표하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입법 및 행정적 보완 대책을 강력히 촉구함. - 역사 왜곡 시설물에 대한 진실 바로잡기 및 미래 세대 전승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집단 학살을 주도한 함병선 장군의 공적비 옆에 객관적 사실을 명시한 안내판을 세우고 평화공원으로 이설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기록을 '죄의 기록'으로 반추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비석 정비 및 안내판 설치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함. · 정현철 예비후보 등 교육 분야 주자들은 4·3 교육이 추념 주간에만 머물지 않도록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령별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체험형 현장 교육을 확대하여 제주의 비극이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미래 세대에게 계승되도록 역설함.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및 관권 선거 의혹에 대한 엄중한 문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지사의 측근 공무원들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조직적인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오 지사는 공식 사과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히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책임 추궁을 예고함. · 이에 대해 야권 후보들은 현직 지사의 관리 소홀과 측근들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등 선거 국면에서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도덕적·법적 책임론이 거세게 대두됨. - 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책임 강화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곤 후보 등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도민이 부담하는 과도한 물류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물류기본권' 법제화를 주장하며, 해상 운송로를 국도 수준으로 관리하여 육지와 차별을 해소하는 등 도민 삶의 질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책임을 강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대림 후보는 기후 위기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재해 국가책임제'의 제주 모델 완성을 약속하고, 공공기관이 모범 사용자로서 퇴직금 회피용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등 노동 존중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공적 영역의 책임성 강화를 역설함. - 정치적 사안에 대한 공당의 공천 책임 및 후보 개인의 도의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힘 이명수 전 사무처장은 직장 내 갑질 및 폭행 의혹을 받는 고기철 도당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당 위원장이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제기하는 등 지도부의 도덕성이 선거를 앞둔 당원과 도민에 대한 모욕임을 강력히 주장함. · 또한 민주당의 음주운전 전과자 무더기 경선 진출 등 후보 자정 기능 마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유권자들은 후보 개인이 과거 행적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공당 역시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내세운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함.
정치·행정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 및 탄소중립 선도 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제주도는 2035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달성을 목표로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하고 전기차 보급 속도를 대폭 높이는 등 화석에너지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로의 급격한 체질 전환을 본격화함. · 특히 재생에너지 수익을 도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에너지 소득 모델'을 가동하고,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이익 공유형 펀드 조성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실질적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에너지 정의 기반의 사회적 전환을 추진함. - K-콘텐츠와 연계한 체류형·고부가가치 글로벌 관광 산업으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양적 성장과 방문객 수 확대에 치중하던 관광 정책에서 탈피하여 K-컬처 및 공연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소비를 늘리고 고유한 문화 자산을 활용한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관광 허브로의 질적 전환을 도모함. · 이를 위해 제2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K-팝 공연 유치, 첨단 관광 기술의 선도적 구현, 마을 단위 생태 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관광 수익이 지역 사회로 환류되는 상생하는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환을 가속화함. - 인재 양성 중심의 교육 혁신과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 구조 대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를 과학기술 기반 도시로 전환하고자 4대 과학기술원 연합 캠퍼스를 조성하고, 우주·바이오·모빌리티 등 첨단 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인재 허브를 구축하여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글로벌 지식 산업의 전초기지로 탈바꿈을 시도함. · 또한 위성곤 후보가 제안한 '제주 AX(AI 전환) 대전환' 등 AI와 신기술을 1차 산업과 행정 서비스 전반에 접목하여 전통적인 경제 구조를 고부가가치 지식 기반으로 재편하고, 도민의 일상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전환 사회로의 도약을 핵심 비전으로 설정함.

경제·관광		<p>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천 및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제주 방문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됨.</p>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 0당 1950원대 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2차 석유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제주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이 0당 1,951원까지 치솟으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해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심화됨. · 공급가 상한이 인상되면서 일부 주유소는 이미 2,000원이 넘는 가격표를 내걸었으며,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가격 상승 및 관광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짐.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213호로 역대 최고치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말 기준 제주지역의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5.3% 증가한 2,213호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워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됨. · 전체 미분양 물량의 81.6%가 준공 후 물량으로 집중된 가운데, 인구 유출과 실거주 수요 감소가 맞물리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취득세 감면 및 할인 분양 정책도 실질적인 해소에 한계를 보임. - 제주 결혼 서비스 비용 전국 최대 상승폭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 2월 기준 제주지역의 결혼 서비스 전체 비용이 지난해 12월 대비 19.2%인 254만 원이나 오르며 전국 14개 조사 대상 지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특히 1인당 식대가 4만 7,000원으로 단기간에 9.3% 급등하며 전체 비용 상승을 주도했고, 대규모 예식 계약 증가와 고물가 여파가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체류 시간 늘었으나 1인당 지출은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율, 체류 일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내국인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전년 대비 4.6%, 외국인은 4.4% 줄어 들며 실질적인 소비 규모는 위축됨. · 개별 여행 비중이 내국인 96.8%, 외국인 91.9%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면서 관광객들이 스스로 저렴한 항공과 숙소를 선택하는 '가성비' 위주의 저소비 트렌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상임. - 면세점 대신 시내 상점가로 쇼핑 패턴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핑 장소가 과거 면세점 위주에서 다이소, 올리브영, 편의점 등 시내 로드숍으로 이동하며, 내국인의 시내 상점가 이용 비율이 2019년 13.4%에서 지난해 51.8%로 4배 가까이 폭증함. · 외국인 관광객 역시 시내 상점가 이용률이 72.4%로 면세점(71.9%)을 앞질렀으며, 크루즈 관광객 또한 간식류 등 소액 구매 위주의 저소비 경향이 강해져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소비 유도 대책이 시급함. - 삼다수-탐나는전 연계 프로모션으로 지역 소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와 광동제약, 제주은행이 협약을 맺고 4년간 40억 원을 투입해 삼다수 구매 인증 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경품으로 지급하여 관광객의 제주 방문과 골목상권 소비를 동시에 촉진함.

경제·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대표 브랜드인 삼다수의 전국적 인지도를 활용해 관광객들이 받은 탐나는 전을 도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관광과 민생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견고히 하려는 전략임.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약자 배려하는 '열린 관광' 무장애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한 달간 도내 관광업체 115개소와 공영관광지 60개소가 참여하는 '모두를 위한 제주, 열린 관광 페스타'를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약자에게 할인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단순한 배려를 넘어 제주를 무장애 관광의 선도 모델로 구축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참여 업체가 전년보다 확대되었으며, 향후 전국장애인체전과 연계해 포용적 관광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임. - 지역 주력 산업 및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테크노파크는 '레전드 50+'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오, 에너지, 디지털 분야 18개 기업에 9억 원을 투입하여 컨설팅과 기술 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 · 또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통해 한국비엠아이 등 도내 제조 현장의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실시간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정 시간 단축과 품질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반을 마련함. -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J-패스' 도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과 관광객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 택시, 공공자전거 등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J-패스' 도입이 약속되었으며,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최적의 노선 설계가 병행됨. · 도민용 정기권과 체류 기간별 관광객용 패스로 구분하여 수요 맞춤형 요금제를 운영하고, 관광객 패스에는 공영관광지 할인 혜택을 결합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관광 이동 기반을 확충할 계획임.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월읍 봉성리 일대 미래농업 체험 관광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그룹 자회사 제주대동이 '그린스케이프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팜 연구시설과 관광이 결합한 국내 최초의 미래농업 체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냄. · 스마트존에서 재배한 고기능성 작물을 활용한 '팜 투 테이블' 메뉴 개발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협업 숙박시설 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연간 1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한다는 구상임. - 제13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성황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를 통한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엑스포는 전기차를 넘어 배터리, 충전 인프라, UAM, 전기선박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기술을 공유하는 글로벌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 · 특히 폐막식에서는 2027년 평양 국제 전기차 엑스포 개최를 공식 제안하며, 정치적 선언을 배제한 민간 차원의 기술 협력을 통해 동북아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려는 의지를 밝힘. - 게임 및 우주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게임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선정하고 게임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과 인재 양성 거버넌스 마련을 논의했으며, 민간 주도 우주개

지역·사회		<p>은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선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국가폭력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자손까지 민사 책임을 지게 하여 다시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지임. <p>- 제주4·3 유족의 오랜 염원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이 4·3 왜곡 및 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9차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연장, 가족관계 정정 확대 등 유족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5대 실천 과제 이행을 약속함. · 특히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3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고, 4·3 당시 강경 진압 공로로 서훈을 받은 인물들에 대한 서훈 취소 검토 등 과거사 청산 의지를 피력함.
	희생자	<p>- 70여 년 만의 4·3 가족관계 정정 첫 사례 확정 및 법적 지위 회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신고 전 아버지를 잃고 연좌제 피해 등을 우려해 다른 친척의 자녀로 등록되어 살아야 했던 4·3 희생자 자녀 등 4명에 대해 정부가 유전자 대조 없이 족보 등을 근거로 첫 가족관계 정정 결정을 내림. · 이번 결정은 4·3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된 특례 규정에 따라 법원 소송 없이 위원회 심의만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로서, 500여 건이 넘는 유사 신청 사례들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p>- 제주 출신 6·25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 시료 채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제주도가 협력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제주 출신 6·25 전사자 1400여 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도내 전역에서 집중적인 유전자(DNA) 시료 채취 활동을 전개함. · 전사자의 8촌 이내 유가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탐문과 보건소 접수를 병행하며, 유전자 일치률 통해 신원이 확인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사업을 추진함. <p>- 4·3 추념일을 맞이한 희생자 추모 및 도민 이동 편의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인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 전역에 1분간 묵념 사이렌을 송출하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도민들이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함. · 추념 당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추모객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주 시내버스의 전 노선 무료 탑승을 시행하며, 교통카드 단말기 전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 도민과 방문객에게 혜택을 제공함.
	평화	<p>- 4·3 민중항쟁 정신 계승 및 반전 평화 실현을 위한 노동자 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노총 조합원 3,500여 명이 제주에 모여 4·3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전 세계적인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촉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며 제주 의 군사기지화 시도 중단을 요구함. ·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4·3의 정신이 불의한 권력에 맞선 연대이자 평화운동의 뿌리임을 강조하며, 4·3 특별법의 추가 개정을 통해 역사 왜곡을 단죄하고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승화시킬 것을 다짐함. <p>- 미래세대의 평화 가치 내면화를 위한 교육 현장의 '평화주간' 운영</p>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선고등학교 등 제주 지역 학교들이 4·3 추념일을 앞두고 역사 특강, 평화 표어 공모전, 유적지 달리기(4.3 러닝) 등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이는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4·3을 세계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연대와 공감의 키워드를 도출하도록 돕는 활동으로, 미래 세대가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는 주역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함. <p>- 서예와 예술을 통한 4·3의 아픔 치유 및 평화 메시지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4·3을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한글 서예 전시회를 개최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붓글씨의 예술적 표현을 통해 제주의 시린 역사가 평화로운 봄으로 나아가는 회복 과정을 도민들과 공유함. · 서예 작품에는 4·3 당시의 고통을 보듬는 시구와 미래 세대에 전하는 평화의 향기를 담아 전통 예술을 매개로 아픈 역사를 성찰하고 위로하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
	대응	<p>- 기후위기 재난 상황에 대한 도지사 후보자별 정책 대응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질의한 결과, 재생에너지 전환에는 대부분 동의하나 가스발전소 추진 중단이나 버스 공영화 등 세부 실행 단계에서는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 단체는 기후위기가 제주 생태계와 건강권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재난임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여부가 유권자들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함을 피력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숙의를 요구함. <p>- 고사리 철 및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소방안전본부의 화재 대응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청명·한식 기간 성묘객과 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등 화재 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발령하고 전 소방관서장이 긴급 상황 지휘를 총괄하는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함. · 화재 취약 대상인 산림 인접 마을과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일일 3회 이상 기동 순찰을 실시하고, 묘지 정비 부산물이나 농산물 무단 소각 행위를 집중 감시하여 선제적인 화재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임. <p>- 중동 사태 여파에 따른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 및 수급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발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인상 우려로 도내 일부 마트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 및 품질 현상이 나타나자, 제주시는 판매소별 공급량을 제한하고 재고 현황을 긴급 점검하는 등 수급 관리에 나섬. · 행정당국은 현재 확보된 재고량이 수개월 분으로 충분하며 관련 조례상 임의적인 가격 인상이 불가능함을 홍보하며, 도민들에게 불안감에 의한 과도한 구매 자제와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것을 권고하는 캠페인을 전개함.
	학생	<p>- 학교 인근 유괴 의심 사례 발생에 따른 경찰 및 교육청의 공동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제주도 내 초등학교 인근에서 낯선 사람이 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동행을 요구한 유괴 의심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자, 교육청과 경찰이 긴급 연락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학로 순찰 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함. · 경찰 수사 결과 일부 사례는 단순한 오해로 밝혀졌으나, 교육 당국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비상시 경찰과 학교가 자동 연결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낯선 사람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조치함.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드론 레이싱 및 창의 AI 경진대회에서의 제주 학생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에서 처음 열린 교육장배 드론 레이싱 대회와 국제 창의 AI 드론 경진대회에서 아라중학교와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 학생들이 금·은·동상을 휩쓸며 미래 과학 기술 분야의 잠재력을 입증함. · 학생들은 정밀한 조종 기술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AI 코딩 미션을 해결하는 등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선보였으며, 학교 측은 학생들이 신산업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프라 지원과 전문 교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임. - 제주 학생들의 제주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및 전승 교육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학연구센터의 조사 결과 도내 초·중·고 학생 10명 중 3명은 일상에서 제주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이 낮을수록 제주어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확인됨. · 학생들은 주로 가족이나 학교 수업을 통해 제주어를 접하고 있으나 실제 대화에서의 사용은 부족한 실정이며, 제주어 전승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학교 교육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이어짐.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